

##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이 경 래\*\*

1. 들어가는 글
2. 자치 생활공동체로서 '마을'의 쇠락, 그리고 '마을만들기'
3. 풀뿌리 운동의 계열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성장
  - 1) 성미산 마을아카이브: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의 모범
  - 2) 풀무 컬렉션 : 공동체 아카이브 기술(archival description)의 새로운 시도
4.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모델로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 1)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구축(시범) 사업의 등장
  - 2) 민·관 협업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 사례 분석
  - 3)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모델의 한계
5. 나오는 글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1030820).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기록관리학전공) 강사. 주요 논저: 「호주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와 '평행출처주의'의 현재적 의미」, 『기록학연구』 40호, 2014;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기록학연구』 38호, 2013;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공저), 『기록학연구』 37호, 2013; 『기록보존론』(공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교육총서 3, 선인, 2013.  
▪투고일 : 2015년 6월 18일 ▪최초심사일 : 2015년 6월 2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7월 1일.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국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주민 주도형 마을아카이브 거버넌스 구축과 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학적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먼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형성과 쇠락의 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했던 성미산과 풀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출현을 살핀다. 본 연구는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구축된 이들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를 마을 공동체의 내적 동인에 의해 추동된 자율적·자생적 산물로 바라본다. 반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러한 독립 마을 공동체아카이브가 민·관 협업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아카이브의 발전 국면에 돌입했다고 본다. 이 글은 서울시가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을 통해서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전시행정적 컬렉션 구축을 넘어서서 마을주민 스스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일부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거버넌스 모델은 궁극적으로 정책 사업화하면서 오히려 마을아카이브가 지니는 풀뿌리적 성격과 아카이브의 지속적 발전 개념을 확보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은 실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명암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한다.

**주제어 :** 마을,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마을아카이브, 지역재생, 풀뿌리 공동체, 민·관 협업, 성미산마을, 풀무 컬렉션, 거버넌스모델

## 1. 들어가는 글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로컬리티, 문화, 신념, 배경 또는 공유된 정체성이나 관심에 근거하여 자신들을 규정하는 집단”을 말한다.<sup>1)</sup> 비록 각 나라별로 상이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으로 인해 고유한 공동체가 발전하여 왔지만,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북미,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지역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은 인종(ethnicity)이나 다문화에 근거한 공동체가, 영국은 노동자와 인종소수자 공동체가, 호주는 원주민(aboriginal)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공동체의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진다.<sup>2)</sup>

한국 사회는 서구에 비해 공유된 정체성이나 관심에 근거한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반면, 특유의 ‘마을’ 공동체가 발전해 왔다. 전통적으로 마을은 특정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이자 ‘우리 마을’ ‘우리 이웃’이라는 공통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는 단위를 말한다.<sup>3)</sup> 마을은 지역민들이 일, 휴식,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일상생활의 기초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일제 시절을 거쳐 군부 시절 산업화의 전면화와 도시 중심의 지역 개발은 사실상 이 모든 전통적 마을 단위들을 재구조화해 나갔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를 전후로 해서 정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이뤄졌던 초기 마을 만들기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도시 산업화의 하부 계층 논리로서 농촌 지역이 다뤄지고 농촌이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산업화의 전진 기지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오늘날 마을 운동과는 확연히 다르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정

---

1) Andrew Flinn,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28, No.2, October 2007, p.153.

2) 이경래·이광석,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 연구』 37호, 2013, 3쪽.

3) 이호,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도시와 빈곤』 82, 2006, 46-48쪽.

치 민주주의와 지방 자치체가 본격화하면서 풀뿌리 지역 공동체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의해 생활공동체로서 마을의 고유한 성격들을 복원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이하 마을아카이브)의 발전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이와 같은 자생적 마을만들기 운동의 흐름 속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아카이브는 2000년대에 마을만들기 운동과 풀뿌리 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구축되기 시작했다. 자생적 공동체에 의해 시작된 마을아카이브는 마을에 거주하는 시민 활동가와 주민, 그리고 외부로부터 아카이브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삼자간의 협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록들’(records about the maeul community)은 주류 문화기관들, 즉 공공아카이브, 박물관, 지방역사협회, 지방문화원 등에서 간헐적으로 수집되어 왔지만, ‘마을공동체의 기록’(records of the maeul community)이 마을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부터이자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독립(independent)’ 마을아카이브<sup>4)</sup>의 경향은 최근에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프로젝트”(2012)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국면, 즉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 프로젝트는 마을 만들기의 기반구축 사업의 하나로 마을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면서 이전의 독립적이고 풀뿌리 운동적 차원의 마을아카이브를 이제는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협치 개념을 염두에 둔 마을아카이브 모델로 전환을 추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아카이브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장악되거나 추진되는 관주도형 거버넌스 모델이 아니라 주류 아카이브의 노하우와 지원을 끌어들이면서도 주민의 자율성을

---

4) Andrew Flinn and Mary Steven, “‘It is noh mistri, wi mekin histri’, Telling our own story: independent and community archives in the UK, challenging and subverting the mainstream”,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edited by Jeannette A. Bastian and Ben Alexander, facet publishing, 2009, p.8; S. Hall, “Constituting an Archive”, *Third Text*, Vol.54, p.89.

보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모델, 그리고 이것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기록학계가 당면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마을아카이브와 컬렉션의 성장을 독립 마을아카이브의 출현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기반의 마을아카이브의 구축의 범위까지 살펴볼 것이다. 마을아카이브 구축에서 드러나는 자생적 마을 생성의 동기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글은 먼저 마을공동체가 생성되고 붕괴되고 다시 복원되는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의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독립’ 마을아카이브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세 번째 장은 마을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서울시의 마을아카이브 구축 시범 사업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가지는 성과 및 한계를 도출할 것이다. 결론은 이제까지의 분석들을 정리하면서 마을아카이브가 마을공동체의 풀뿌리 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지역 자치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주민 주도형 마을아카이브 거버넌스 모델의 지속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 2. 자치 생활공동체로서 ‘마을’의 쇠락, 그리고 ‘마을만들기’

‘마을’은 우리에게 연고주의에 근거한 지역 공동체로 기억된다. 마을은 특정한 지역에 위치하여 그 구성원들이 서로 알고 지내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이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일체감을 갖는 우리네 공동체로 볼 수 있다. 즉 지역성 못지않게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과 유대감은 마을을 규정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sup>5)</sup> 역사적

으로 볼 때, 마을은 조선 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선 중·후반이 되면 자율적인 생활 공동체로써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나간다. 마을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마을문제를 결정했고, 정신적 유대감을 가지고 공동의 전승문화를 향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였던 것이다. 특히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의 자율적인 조직들, 대동회, 동계와 두레 등은 마을이 저마다의 정체성과 문화를 구현하는 주요한 기제였다. 예를 들어, 마을의 자치(self-government) 조직인 대동회는 행정기구들처럼 강제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영향력과 조직력을 지닌 모임이자 회의체였다.<sup>6)</sup> 대동회가 이렇게 마을 자치의 협의체라면 비슷한 결사체로 동계는 마을공동체 의식 절차에 관한 기록들, 즉 소요되는 제물의 종류와 비용, 제관 명단, 절차,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운영에 관련된 문서들을 생산·보존해 왔다.<sup>7)</sup> 한편 두레는 마을내 코문 공동노동의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의 경작지에 대해 자타의 구별 없이 일제히 조직적으로 집단 노동을 하는 조직으로, 각 집의 경지면적과 노동력에 따라서 나중에 임금을 결산하여 주고받는 공동노동의 형태로 유지되었다.<sup>8)</sup> 이 외에

5)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을 지역을 강조하는 area 또는 region이 아니라 neighborhood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area나 region에 비해 neighborhood는 이웃이라는 사람중심의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호,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46-48쪽 참고.)

6) 대동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상호부조를 통해 마을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협력을 진전시켜 마을생활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단위로서 대동회는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주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7) 특히 이러한 마을의 동계 기록들은 마을공동체 의제의 연혁과 변천을 알 수 있는 희귀 자료로서 역사학뿐만 아니라 민간 기록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장흥 호계리, 논산 양암, 공주 부진, 대전 무수동, 논산 후동 등에서 발견된 동계 문서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8) 협업의 성격을 띠는 공동노동형태의 두레는 한국 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농촌 경제를 지배해 왔던 노동조직이었다. 노동의 양을 줄여 서로 도울 뿐만 아니라

도 마을은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은 서로 바로잡아주며, 예속을 서로 권장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나름의 자치규율(향약)을 제정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강화해 나갔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마을은 대동회, 동계, 두레, 향약 등으로 매개되면서 이렇듯 자치, 공동의례와 노동, 그리고 생활문화의 공간으로서 유대감을 가진 주민들이 자율적인 조직과 규율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발전시켜왔던 삶공동체였다. 즉 마을은 ‘공통의 규율체(communs)’에 기초한 자율적·자생적 공동체로서 지역의 생활 문화를 전승·발전시키는 기본 단위체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생활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해 온 이들 마을의 속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자율성에 있어 크나큰 단절을 경험한다. 일제는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체제로 강제편입하기 위해 마을과 마을의 가치들을 해체해 나갔다.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제는 식민화의 편의를 위해 마을을 행정구역으로 재편했고 한국에서 일본인의 사적 소유권체계를 발전시켰다. 마을이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공유지로서 농지와 산림은 일본인에게 사적 재산으로 귀속되었고, 이것으로부터 일본인들은 억압적으로 소작료를 징수함으로써 더 이상 마을주민들 간에 상호부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마을주민들 사이에 공리를 위한 호혜관계는 붕괴되어 나갔고 마을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었다.

해방이후 1960년대에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 역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해체를 가속화했다. 우선 농촌지역을 살펴보면, 산업화로 인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마을주민의 상당수가 도시로 유입됨으로써 장기

---

공동노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농약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 즐기므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였다.

적으로는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당시에 농업 행정이 주로 산업화에 초점을 두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난한 농촌 지역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농촌에서 마을공동체의 해체를 낳았다. 도시의 경우에도 새로운 인구의 대량 유입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도시지역의 마을공동체들을 위협했다. 비록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와 편리한 도시 시설들을 제공했지만 도시민들은 심각한 빈부 갈등과 소외를 겪었다. 경제적 부가 모든 가치를 척도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주거와 삶의 반경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편의 공간으로 간주되거나 단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취급되었다. 대단지 아파트의 보급은 마을이 가지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의 토대를 잠식했고, 이웃 간의 유대감은 점차 약화되어 마을공동체는 빠르게 사라져갔다.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마을공동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정권 시기였다.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도시 경제와 비교했을 때 낙후한 농촌경제를 근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공식적으로 전통적인 마을의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면서, 근면, 자조, 협동을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시 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생활환경이나 관계시설, 다리, 도로 등 주로 농촌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되었다. 새마을운동의 개발지향적 전략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시지역의 재생사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정부와 토목건축업자들의 주도하에 도시지역에서 물리적 거주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재개발과 재건축사업들이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탈산업화시대로 옮겨가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정부 주도적이고 물리적 개선에 집중하는 지역 개발 방식은 대단히 비효과적이고 심지어 지역민의 삶에 폭력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오히려 개발 이익을 둘러싼 분쟁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했고 공동체적 요소를 크게 박탈했다.

1990년대는 국내 정치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면서 지방자치체가 본격 화되고 주민 자치가 강조되는 시기이다.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이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정부의 리더십 대신 민·관 협력이 강조되거나 민간 공동체들의 지역 정책 참여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대 중반에 진행된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여전히 정부 주도형 도시 재생이라는 한계를 드러냈고 전시 행정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마을 자치와 자율의 근본 가치를 주변화하고 그 쇠락을 부채질했다면, 지역의 자생적인 거주자운동으로서 ‘마을만들기’가 풀뿌리 공동체운동의 주도하에 성장해 나갔다. 1990년대에 등장한 마을만들기라는 자생적인 흐름은 생활공동체로서 전통의 마을을 회복하기 위해 전개된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을 말한다.<sup>9)</sup> 생활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마을만들기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공동체, 즉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자치공동체의 구축을 지향했다. 먼저 경제공동체는 신뢰와 협동을 기초로 삶의 안정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실현해주는 공동체를 말한다. 문화공동체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과 개개인에 내재한 창조적 능력을 구현하는 공동체이며, 자치공동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삶의 문제에 대한 자치를 확보하는 공동체를 각각 의미한다.<sup>10)</sup>

9) 1970년대를 전후로 새마을 운동과 같은 지역발전 운동의 몇 가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이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90년대 마을만들기의 전사라기보다는 근대적 토건 프로그램을 농촌에 적용한 ‘마을망치기’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실제 마을 만들기의 개념과 구체적인 진행이 이뤄진 것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지방자치가 시행된 199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마을만들기의 발전 과정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모임 전개 시기(1990~1994), 주거환경 개선 운동 발전 시기(1995~1998), 지방 자치단체 및 정부 차원의 다양한 마을 프로그램 시도기(1998~현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마을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 세 가지 경제적·문화적·자율적 공동체를 일구어 마을의 전통적 개념을 복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 주도의 개발 지향적 마을 정책에 가장 큰 피해자였던 지역 주민들은 이처럼 풀뿌리 마을만들기 운동을 통해 붕괴된 마을공동체를 재생하려 했다. 이전의 개발형 마을 개조사업과 달리 마을만들기는 사라진 마을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더불어,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대신 마을 주민들 사이 인간관계의 변화를 통한 생활환경의 질적인 개선에 방점을 두었다.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마을만들기는 공동육아에서부터 협동조합, 마을미디어, 마을기업,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북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자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을만들기가 점차 진전되고 확대됨에 따라 몇몇 마을들에서는 문화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마을관련 기록들을 의미 있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자신들의 활동들을 지역 주민들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한 내재적 필요성의 산물이었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고민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갔다. 마을만들기라는 풀뿌리 공동체 운동 속에서 자연스레 ‘독립’ 마을공동체 아카이브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역사·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축된 대표적인 마을 자치 기록화의 사례가 성미산마을아카이브와 풀무컬렉션이다.

---

10) 박승현, “풀뿌리 주민자치에 기반한 마을만들기의 향후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포럼 발제문, 2004; 여관현,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1), 2013, 61쪽.

### 3. 풀뿌리 마을운동 계열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성장

#### 1) 성미산마을 아카이브 : 독립 공동체아카이브의 모범

성미산마을은 마을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미산이라는 작은 산자락 주위에 위치한 지역 공동체를 일컫는다. 성미산마을은 1994년에 스무 남짓 가구들이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마을만들기의 역사를 시작했다. 그 후 2003년에 시정부의 일방적인 성미산 개발계획에 반대하여 성미산 주민들이 단합하여 맹렬히 저항한 ‘성미산 지키기운동’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성미산마을은 마을주민들 간에 끈끈한 정신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풀뿌리 공동체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최근까지도 황폐화된 도시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변화의 새로운 대안적 흐름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기업을 운영, ‘도시 속의 마을만들기’를 정착시키고 지속적 마을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성미산마을은 교육, 경제, 자치, 복지, 환경, 문화, 협력단체 등 크게 일곱 개의 영역에서 마을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문화영역에서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성미산마을 아카이브’(이후 성미산아카이브)를 구축했다. 마을 주민들 간의 기억 공유와 마을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마을의 내재적 필요성으로부터 등장한 ‘성미산아카이브’는, 마을 활동의 다양한 증거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2008년 후반 경 최초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성미산아카이브는 이후 외부로부터 아카이브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공동체 내부에서의 마을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인 틀을 갖춰 발전시켜 나간다. 초기부터 마을 주민들은 아카이빙의 전 과정

에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기반한 ‘참여아카이브’ 모델을 표방했고, 성미산마을 내부의 다양한 소규모 공동체 아카이브를 연계하는 디지털 ‘허브아카이브’ 시스템을 성미산아카이브의 기본 모델로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미산아카이브 ‘전문가위원회’가 마을주민 대표와 아카이브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여기서 성미산마을의 대표적인 육아공동체인 ‘우리어린이집’ 기록물을 대상으로 아카이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카이브 전문가들과 기록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각 아카이빙 과정에 참여하여 구체적 방법론을 제공하고 전통적인 아카이브 패러다임을 공동체 컬렉션에 적용함으로써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을 돕는 구조였다. 2009년에는 마을 주민들과 아카이브 전문가그룹의 협업을 통해서 두 개의 공동체 아카이브, 즉 ‘우리어린이집’과 ‘마포연대’ 컬렉션 구축 작업을 전개했다. 비록 이들 컬렉션이 오늘날 물리적으로 완결된 형태로 남아있진 않지만, 성미산아카이브로 인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모델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기록학계 내부에 촉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즉 한국 사회에서 공적기록 중심에서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동하는데, 풀뿌리 공동체 운동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했던 성미산아카이브가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2010년에 접어들면서 성미산마을은 마침내 독립 마을공동체아카이브의 주요한 가시적 성과로서 ‘성미산지키기운동 아카이브’를 구축했고, 디지털 허브인 성미산아카이브를 통해 서비스하기 시작했다.<sup>11)</sup> 곧이어 2010년 말에는 ‘성미산마을아카이브 정책/운영 규정’을 만들어, 성미산마을아카이브 구축의 원칙과 과정, 기록물 관리규칙, 기록물 이용정책 및 등록양식 등 규정을 만들었다.<sup>12)</sup> 특히 이들 규정은 기록의 생산자인

---

11) 성미산아카이브는 2010년 11월에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에 온라인 카페에 만들어졌다. 카페주소는 <<http://cafe.daum.net/archpe>>이다.

마을주민들이 아카이브 규정에 따라 직접 참여하여 수집에서부터 분류·기술하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어 초창기에 표방한 참여형 아카이브 모델을 실제화 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sup>13)</sup> 마을의 소규모 공동체들에 의해 수집된 기록들은 마을의 아카이브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선별된 뒤, 소규모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기록의 유형별, 주제별, 기능별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등록양식에서 규정하는 기술항목들을 통해 기술되는 절차들을 거치게 된다. ‘우리어린이집’ 컬렉션의 경우, 어린이집의 기능 분석에 기반하여 계층적인 구조(대·중·소)로 분류를 시도한 데 반해<sup>14)</sup>, ‘성미산지킴이운동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이같은 계층적 구조 없이 단순히 주제별 분류에 기반하였다.<sup>15)</sup>

정리하면, 성미산마을은 마을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전개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아카이브 전문가들과의 협업에 기반하여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포함해서 마을 내에 아카이브 관련 의사결정체인 아카이브 전문위원회의 조직, 기록관리의 모범 실무를 위한 아카이브 규정의 제정, 그리고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온라인 카페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마을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조건없는 헌신을 통해, 성미산아카이브는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가 가질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현실적 곤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자생적인 독립 공동체아카이브 구축의 가능성을 열었다.

---

12) (사)사람과마을 ‘성미산마을아카이브위원회’, “성미산마을 아카이브 2010 정책/운영규정”, 2010.12, <<http://cafe.daum.net/archpe>>, [인용 날짜: 2015. 4. 22].

13) 앞의 글, 11쪽.

14) 최윤진, “성미산마을의 마을아카이빙 방안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대학원 석사논문, 2011.

15) 성미산마을아카이브, <<http://cafe.daum.net/archpe>>, [인용 날짜: 2015. 4. 22].

## 2) 풀무 컬렉션: 공동체 아카이브기술(archival description)의 새로운 시도

풀무 컬렉션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에 위치한 풀무마을의 공동체 아카이브다. 풀무컬렉션이 풀무학교 전공부(이하 풀무전공부) 1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구축되긴 했지만, 이 학교가 마을 대학으로 마을을 연구하기 때문에 풀무 컬렉션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풀무전공부에서 유기농법에 대한 기술적 훈련은 풀무마을의 정체성, 즉 생태농업 마을로서 풀무마을을 대변한다. 또한 풀무전공부의 학생소비자협동조합은 이후 풀무생산자협동조합을 이끌어 자치와 자율을 지향하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마을이 친밀함만으로 성립될 수 없고 자립과 자치의 토대를 갖춘 자치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마을경제’ 뿐만 아니라 ‘마을지식’과 ‘마을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풀무마을은 협동조합을 통한 경제활동 외에도 문화활동, 환경활동, 미디어활동을 통해 생활공동체로서 자생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오고 있다.<sup>17)</sup>

2011년, 풀무 컬렉션은 마을 내에 위치한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풀무전공부 학생들이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했다. 풀무전공부에서 역사 수업을 듣는 여덟 명의 ‘풀무아키비스트’들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풀무전공부의 사진 4만 장을 학교, 졸업생, 선생님들로부터 기증을 받아 수집했고, 이렇게 수집된 사진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분류·기술했다. 마을 주민이자 기록생산자인 풀무아키비스트들은 초기에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풀무컬렉션 작업을 시도했지만, 외

---

16) 이영남, 「공동체아카이브, 몇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호, 2012, 15쪽.

17) 예를 들면, 유기농 식품을 파는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 마을에서 사용하는 가구를 만드는 ‘갯골목공소’, 마을의 기금조성으로 마련된 ‘박목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부로부터 강요된 아카이브 표준들이 소규모 마을공동체 기반의 풀무컬렉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과감히 기록관리의 국제표준이나 방법론을 포기했다. 대신 풀무마을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주제들을 각자 선택한 뒤 주제(시리즈)별로 기록물을 수집·선별하고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감수성에 기반하여 기술하였다.<sup>18)</sup> 최종 생산된 여덟 개의 시리즈는 아카이브의 계층적 구조에서 조직화된 전통적인 시리즈가 아니라 차라리 편의적이고 조직화되지 않은 주제의 묶음이었고, 기술(description) 역시 표준 기술요소를 중심으로 한 기술방식이 아닌 ‘내러티브 기술’이라는 새로운 방식, 즉 에세이와 영상 내러티브의 형식을 빌려 기술되었다.<sup>19)</sup>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기술’은 공동체와 개인이 아카이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D(G)와 같은 국제표준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풀무 아키비스트들은 기술이 풀무마을의 가치와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되어야 한다고 보고, 객관성, 표준, 그리고 근대 아카이브 이론과 메타포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방법론들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컬렉션을 분류·기술했다. 일례로 ‘풀무벼’ 시리즈의 경우, 풀무아키비스트는 풀무마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생태농업을 잘 설명하기 위해 벼와 농부 사이의 대화 형식의 내러티브를 통해 컬렉션을 기술했다.<sup>20)</sup> 벼농사를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벼와 자연의 관점에서 기술함으로써, 풀무마을의 생태농업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기술서에 담아냈다.

결국 성미산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독립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로서

18) 이영남, “공동체아카이브 방법론-풀무학교 10주년 컬렉션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인간과기록연구단 학술대회 발표집, 2012, 28쪽.

19) 이영남, 「공동체아카이브, 몇가지 단상」, 18-19쪽.

20) 이영남, 위의 글.

폴무컬렉션은 주민의 자생적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의미 외에도 민간 기록관리에 있어 새로운 아카이브 기술방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풀뿌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방하는데 있어 공적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패러다임과 표준이 가지는 한계를 직시하고 더 나아가 분류·기술 영역에 있어서 보다 자생적이고 대안적 아카이빙 과정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 4.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모델로서 ‘마을공동체아카이브’

##### 1)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구축(시범) 사업의 등장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구축(시범) 사업’은 서울시가 2012년 이래 추진해 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2013년부터 본격화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물리적 재개발과 재건축에 집중된 오세훈 전임 시장의 ‘뉴타운’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정책 대안으로 등장했다. 2012년 3월, ‘서울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의 제정과 함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마을지원센터)가 그해 8월 서울시의 위탁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마을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관련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로컬리티(지역성)에 기반하고 마을에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마을공동체의 구축을 지원했다. “주민의 필요에 따라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서울”을 표방하면서 기관의 비전을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주도 마을공동체를 발굴, 지원하는 것으로 천명했다.<sup>21)</sup> 이를 위해 마을지원센터는 풀뿌리

21)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목적은 다음에서 참고.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intro/mission.asp>>, [인용 날짜: 2015. 6. 12].

성, 호혜성, 협동성을 중심 가치로 두고 (주민)수요와 (정부)정책의 매개자로서 마을공동체와 서울시 행정 상호간의 소통과 협업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았다. 즉 마을공동체만들기라는 새로운 도시정책 플랫폼을 통해 서울시는 물리적·하드웨어적 개발보다는 질적·소프트웨어 중심적 발전전략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했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국가주도형 '마을' 복원사업이 물리적 환경개선에 머물렀던 점을 기억한다면, 이는 대단히 비약적인 정책 접근의 전환이기도 했다.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이러한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정책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중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sup>22)</sup>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 서울시 마을지원센터는 마을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첫 움직임으로 마을아카이브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있어 관주도가 아닌 주민주도형 마을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반 이슈들을 점검하고 주민주도형 마을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구체적인 모범실무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마을지원센터는 같은 해 연말에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한국 사회에서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마을아카이브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서 기능, 구축 방법론, 그리고 실제 한국사회에서 적용가능한 마을아카이브 구현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 연구결과물은 이후 각 마을에서 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마을아카이스트'의 교육교재로 보급되었다.<sup>23)</sup>

22) 마을공동체 사업은 크게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주민제안사업은 총 15개 분야로 마을공동체 사업 전체예산 중 87.5%를 차지했고, 기반조성사업은 총 6개 분야로 전체예산 중 12.5%를 차지했다.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마을공동체 백서』, 26쪽.

2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지역과 기록 경영연구원, 『마을아카이브 연구 및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기록관리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서』, 2012.

마을지원센터는 연구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서 마을공동체에 실제 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은 2013년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아카이브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당시에 마을아카이브가 마을공동체 기반이어야 하고 이들 아카이브 전문가로부터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다. 시범사업은 6개 마을의 신청을 받아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었다.<sup>24)</sup> 연구프로젝트와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지원센터는 서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인프라를 다지고자 했다. 즉 단순히 마을기록들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이 스스로 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을 전문아키비스트의 양성을 비롯해 마을별 아카이브 조직의 구성과 시범적 실물기록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다음은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섯 마을 중 두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아카이브의 구체적 사례를 들여다 볼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섯 개 마을공동체는 은평, 성미산, 도봉, 노원, 정릉, 그리고 양천 목3동 마을이지만, 사실상 성미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섯 마을의 사례는 서울시 시범사업과 동시에 거의 새롭게 시작했던 경우다. 그래서, 이 글에서 보려는 두 군데 분석대상 마을의 선정은, 이미 풀뿌리 마을아카이브의 전통을 지녀왔던 성미산 마을아카이브와 새롭게 서울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마을들 중 활동이 많았던 은평 마을아카이브 사업에서 이뤄졌다.

---

2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기억과 기록 경영연구원,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2013, 6쪽.

## 2) 민·관 협업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 사례 분석

### (1) 은평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

1990년대 이래 다양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공동체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은평마을은 자신들의 활동의 과정 속에서 생산된 마을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은 재정 및 인력 문제 그리고 기록화 방법론의 부재 속에서 쉽게 진행되지 못해 마을기록은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 없이 몇몇 개인들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분산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마을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은평 마을이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은평 마을에서 마을공동체의 풀뿌리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은평시민회시민연합(이하 은평시민연합)이 서울시의 마을아카이브 구축 시범사업에 지원했다.<sup>25)</sup>

마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은평마을의 마을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진행됐고, 먼저 은평마을의 아카이브 실무조직이 은평시민연합의 시민활동가와 마을의 장년층 주민들로 구성되었다. 장년층을 마을아카이브 스트로 활용한 이유는 이들이 오랜 기간 마을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잘 인지하고 생활 환경 내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즉 마을 기록의 대부분이 지역 구성원들의 기증 등에 의해 수집되기 때문에 장년층과 대다수 마을주민들의 폭넓은 인간관계망이 아카이빙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은평에서 이뤄졌던 아카이브 구축 시범사업은 정부의 ‘사회공헌일자리창출’ 프로젝트와 연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은퇴한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전문지식,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25) 은평시민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순옥 인터뷰, 2014. 9. 1

지역공동체에 참여,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시민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량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지녔다. 장년층 주민들로 구성된 은평의 마을아카이비스트들은 이러한 사회공헌 일자리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해 활동비를 충당했다. 네 명의 장년층은 마을지원센터의 마을아카이브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본격적으로 마을아카이비스트로 활동을 시작했다.

은평 아카이브 실무조직은 먼저 마을아카이브가 무엇을 수집할 것인지, 즉 마을 아카이브의 주제설정을 연구팀과 논의한 뒤, 은평마을의 첫 번째 기록 컬렉션으로 은평마을의 축제기록을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은평(마을)상상축제〉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최했던 마을 단위의 축제로서, 공동체의 문화를 공유하고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마을 공동체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축제의 시작부터 이의 발전사를 포함한 축제기록을 아카이빙하면서, 은평마을은 마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했다. 주제를 선정한 후, 마을아카이비스트들이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 마을주민들, 마을신문사, 시민단체 등 마을 주변에서 축제관련 기록들의 수집에 나섰다. 장년층 마을아카이비스트들에 의해 수집된 축제기록들에 대해, 연구팀이 기록들의 분류와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축제기록은 연도, 주제, 기록유형별로 분류되고 기본정보, 기록유형정보, 평가정보, 부가정보 등 기술요소들에 의해 기술되었다. 마을공동체에 의한 마을기록의 기획에서부터 수집, 정리, 분류, 그리고 기술은 최종적으로 〈은평상상축제〉(2013. 10)와 서울시 〈마을엑스포〉 행사(2013. 12)에서 두 번의 전시를 통해 공동체 주민들 간에 공유되었다.<sup>26)</sup>

은평 마을아카이브는 비록 초기에 관에 의해 추진되긴 했지만 이후 시민활동가, 장년층 마을아카이비스트, 그리고 연구팀간의 공조를 통한

---

26)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기억과 기록 경영연구원, 앞의 글, 2013, 65-66쪽.

민·관 파트너십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이들 삼자간의 공조를 통해, 은평마을은 크게 네 가지 성과를 성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마을 아키비스트의 양성, 마을내 아카이브 실무조직의 구성, 아카이브 실물로서 〈은평상상축제〉 컬렉션 구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마을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주민간 소통과 마을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를 들 수 있다.

## (2) 성미산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

은평마을과 달리, 성미산마을은 앞서 풀뿌리 공동체 사례에서 소개한 바처럼 서울시의 지원 없이도 이미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례이다. 2008년 이래, 성미산마을은 마을공동체 기반의 자생적인 마을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자율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역사를 가진 성미산마을이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초보 단계에서 시작했던 다른 마을의 아카이브 구축사업과는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최초 성미산 마을아카이브의 ‘독립’형 공동체아카이브의 모습에서 이후 민·관 파트너십의 공동체 아카이브로 전향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성미산 마을아카이브는 서울시가 중간에 개입하면서 만들어진 민·관 협업의 정책모델이 독립 공동체아카이브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성미산마을에서의 아카이브 시범사업은, 먼저 서울시 연구팀이 2008년 초창기부터 마을아카이브 구축에 줄곧 참여해서 마을아키비스트로 활동해 온 풀뿌리 시민활동가<sup>27)</sup>와 접촉하여 성미산마을에서의 마을아카이브 구축에 대해 상호 협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양자는 ‘성미산학교’의 기록, 그 중에서 학생기록의 컬렉션을 구축하기로 결정했

27) 성미산마을의 시민활동가이자 마을아키비스트 위성남 인터뷰, 2014. 9. 3.

다. 성미산마을에 위치한 대안학교이자 성미산마을의 풀뿌리운동의 중심인 성미산학교는 설립 이래 학교에서 생산된 많은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마침 2014년 10월, 성미산학교의 10주년에 맞춰 10주년 기념행사의 일부분으로 아카이빙 컬렉션을 기획했다. 성미산학교 교사회가 마을아키비스트로서 실제 성미산학교내 학생기록 컬렉션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연구팀은 특히 디지털기록의 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학생기록 수집을 위한 모범 실무를 제공했다. 기록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집되었고 수집 후 역사, 홍보, 문화, 교육, 기증자별 컬렉션 등 주제별로 그리고 기록유형별로 정리되었고, 학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에 대한 구술도 진행했다. 이러한 마을아카이빙 활동의 결과물은 학교에서 이뤄졌던 전시를 통해 마을주민들 간에 공유되었다.

성미산아카이브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사회에서 마을 기반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자생적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후 성미산아카이브는 초기의 활력을 잃고 재정, 공간, 인력문제 등으로 인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록의 경우에 시민 활동가 개인 컴퓨터에서 마을 기록을 관리해 올 정도로 기록 보관도 엉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하반기에 서울시가 제안했던 민·관 협력의 새로운 공동체 아카이브의 모델로서 성미산학교 아카이브의 구축은 성미산마을이 공동체아카이브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3)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모델의 한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아카이브 구축(시범)사업은 이렇듯 은평과 성미산에서 보는 것처럼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에 기반해 민간 주도의 마을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마을아키비스트의 교육과 양성,

그리고 아카이브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 즉 관 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아카이브 수집과 콘텐츠 구축이 아니라 마을의 기록화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마을주민이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의 거버넌스 모델에 아주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정으로서 아카이브(archives as a process)”에 주목해서 보면,<sup>28)</sup>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구축사업이 해당 마을구성원들의 ‘합의’(consensus)를 도출하는 과정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마을에는 마을의 기록을 수집하는 다양한 잠재적 수집기관(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마을에서 전개되어 온 마을기록 수집의 고유한 움직임과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그룹들을 연계해 잠재적 수집기관(자)들이 마을아카이브 구축의 합의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합의과정을 거쳐 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마을아카이브는 그것에 걸맞는 위상과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는 마을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마을의 기록을 수집, 보관하는 마을주민이나 공동체들을 먼저 파악하고 이들을 마을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합의과정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등한시했다. 특히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사결정 조직과 실무팀의 구성에 있어 공동체의 폭넓은 합의는 더욱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범사업은 이러한 합의과정에 대한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 시범사업에서의 파트너십은 마을구성원과의 합의 과정을 거쳐 대표성을 지닌 조직이 아니라 시범사업에 지원한 시민단체와의 협업이었고, 각 마을에 존재하는 잠재적 수집기관(자)들은 파악조차 되지 못했다. 대표

---

28) Ann Laura Stoler, “Colonial Archives and the Arts of Governance”, *Archival Science* Vol.2, 2002, p.87.

성을 지니지 않은 조직의 마을아카이브 구축은 결국 마을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실무단이 마을기록을 수집할 경우에도 기록화 활동의 정당성을 주민들로부터 확보하기가 어려웠었다.<sup>29)</sup> 예를 들어 은평 마을의 경우에, 마을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집기관인 〈은평마을신문〉과의 소통이나 네트워킹 없이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은평 마을아카이브가 마을 구성원의 폭넓은 합의에 기반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둘째, 서울시 시범사업은 각 마을공동체의 기록화 수준이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아카이브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적용하지 못했다. 비록 시범사업이 각 마을에 최적화된 마을 아카이브 모델을 지원하는 것을 표방했지만, 서울시가 제공한 각 마을에 대한 컨설팅은 제한된 범위, 즉 수집형 아카이브 지향, 주제 아카이브의 구축, 마을 주민 중서너 명으로 아카이브 실무팀을 구성하는 수준에서 제공되었다. 시범사업 참여마을 모두 수집형 아카이브를 구축했으며, 각 마을은 수집대상 주제의 다양성(예를 들면, 학교학생기록, 은평 상상축제, 교통이야기 등)을 제외하고는 기록관리 컨설팅에 있어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 다시 말해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마을이 마을기록 관리에 있어 제각기 다른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아카이브 접근법과 방법론을 가지고 수집형 아카이브를 구축했으며, 결과적으로 아카이브 컨설팅에 있어서 각 마을별 특성이나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다. 특히 이미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마을 아카이브 움직임을 시도한 성미산마을의 경우에는, 초보적 아카이브 단계의 다른 참여마을과는 차별화된 단계 업그레이드된 컨설팅 전략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이 크다. 즉 이미 수집형 주제별 아카이브를 구축

---

29) 실제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방향모색 토론회’(일시: 2013.11.18., 장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 참여마을의 마을 아키비스트들은 종합토론에서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대표성의 부족에서 오는 아카이빙 활동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러한 합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일부 진행되었다.

한 성미산마을의 경우, 성미산마을아카이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 즉 물리적 공간, 인력, 시스템, 자원 등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을 보다 더 도모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실제 공동체 내부의 요구에 맞추어 아카이브 구축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면서 마을로부터 나오는 아래로부터의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있다. 성미산마을의 경우에 단순히 하나의 소규모 공동체 컬렉션을 더하기보다는, 차라리 성미산 마을아카이브가 지향했던 디지털 허브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 지원이 차라리 성미산 공동체에 더욱 요긴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은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의 핵심 현안인 ‘지속성’을 위한 마을아카이브 체계를 제시하거나 돕지 못했다. 이 측면에서, 실상 서울시 시범사업은 일부 전시행정과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겠다. 서울시의 마을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연구프로젝트인 모범실무 제안(2012년 8월~12월)과 시범사업(2013년 4월~12월)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 기간 총 11개월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013년 말에 그동안 작업한 마을아카이브에 대한 전시와 토론회 개최를 통해 결과를 공유한 이후에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 및 후속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이 현재까지도 부재하다. 민·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파트너십의 구축에 대한 중장기 전략 모색은 공동체 아카이브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장기적 전망 속에서의 후속 조치의 부재는 서울시가 성취한 그 동안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시범사업 참여마을의 경우, 공동체 내부에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마을 아키비스트의 생산, 그리고 시범적인 실물 구축 및 전시를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불씨를 지켰지만, 시범사업 종료 후 현재까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개별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중장기적으로 이들 개별 공동체아카이브들을 공공영역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조직적·시스템적 체계의 상시 구축, 그리고 이러한 상시소통채널을 통한 행정, 마을주민, 시민활동가, 그리고 아카이브 전문가 간의 파트너십의 구축이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아카이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 5. 나오는 글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국내 마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서적 지역 공동체인 대동회와 두레 등 ‘마을’의 가치들이 어떻게 쇠락했고, 불과 1990년대까지 국가주의에 마을이 어떻게 개발의 논리에 쉽게 흡수, 활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봤다. 이에 반발해 황폐화된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역사적으로 시도됐던 풀무와 성미산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생적인 공동체의 형성과 아카이브의 출현 또한 보았다. 기록학계는 이에 주목해 역사적으로 관 주도가 아닌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아카이브의 구축 방법을 모색해왔다. 주로 공동체의 참여, 스투어트쉽(stewardship) 공유, 그리고 아카이브 액티비즘 등이 그 논의 구도의 중심에 있었다. 이 글의 4장에서는, 보다 최근의 사례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졌던 은평과 성미산의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을 살펴봤다. 이는 직접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형성에 지역정부가 적극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민관 협업 구도의 새로운 국면의 명암에 대한 조명에 가깝다. 즉 최근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의 문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에서 지원 정책 지속성의 단절 상황 등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시정부 지원 사업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다르게 말하면, 마을아카이브의 지속적 유지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 없이, 또는 일시적인 지원 이후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에 기대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재원 마련, 인력 충원, 그리고 보존 공간 등 현실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지속성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을 구성원 스스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매개해 공동체의 중요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제공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공식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현안이다. 그래서, 이 글은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체아카이브가 미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지방정부, 정부 이 3자가 상호 협력적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하는지를 논하고 글을 맺을까 한다.

먼저 마을 단위에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빙의 동력을 지속적이고 자생적으로 자체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대한 한계에서 지적한 것처럼)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합의가 마을 주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의 공통된 이해 없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그리고 향후 다른 공동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몇몇 시민활동가에 의한 마을아카이브의 구축은 마을아카이브 운동의 중단까지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마을아키비스트’의 안정적 재생산은 마을아카이브 운동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다. 마을아키비스트란 마을공동체에서 기록관리의 실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마을공동체가 전문적 아키비스트만을 고용하기에 무리가 따르지만, 이제까지 이와 같은 역할을 마을의 장년층 마을주민, 시민활동가, 자원봉사자가 수행해왔다. 서울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 마을주민들이 마을

의 기록을 수집하고 이것을 정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이들의 재생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래서, 더욱더 전문 공동체 아카이브의 양성에 대한 대안 마련은 시급하다.<sup>30)</sup> 마을만들기가 곧 ‘마을을 만드는 사람만들기’인 것처럼, 마을아카이브는 결국 공동체 아카이브를 만드는 사람만들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고, 마을아카이브를 재생산하는 체계적인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마을공동체 아카이브가 마을공동체 내·외부의 다양한 공동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공공아카이브,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역사협회와 같은 마을내의 주류문화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민·관 협업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작동하는 가장 실무적인 거버넌스의 영역으로서, 주류 문화기관들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아카이브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또한 주류 아카이브 입장에서라도 민간과 지역 공동체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수집범위를 수월하게 확장할 수 있다.

넷째, 이외에도 비주류 소규모 공동체들과의 상호 협력 관계 또한 아카이브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의 마을도서관, 마을신문, 그 외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들, 예를 들면 최근 한국

---

30) 뉴욕의 레즈비언 허스토리 아카이브(Lesbian Herstory Archives) 구축에 관한 한 논문은,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아카이브주의 공동체내 자생적 재생산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몇몇 아카이브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자들을 아카이브트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Joan Nestle, "The Will to Remember: The Lesbian Herstory Archives of New York", *Feminist Review*, Vol.34, *Perverse Politics: Lesbian Issues* (Spring, 1990), pp.86-94 참고). 더불어 최근에 공동체아카이브의 지속성을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춘 글에서도 공동체 아카이브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아카이브 전문인력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Joanna Newman, "Sustaining community archives", *APLIS*, Vol.24(1), 2011, p.40).

에서 부상하는 공동체 예술아카이브, 소수자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과 인적·시스템적 네트워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가 고립되지 않고 상호연대를 통해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서로간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 효과를 배가하는 특징을 가지게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들은 이러한 공동체아카이브 운동들을 상호 네트워킹해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몇몇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내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 모델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sup>31)</sup> 즉 영국의 사례는 지방 정부의 차원에서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네트워킹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체 아카이브의 지속성을 일정부분 체계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들 간에 상호 링크를 제공하여 집단적 목소리를 생산하고, 공동체들의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지속성과 함께 거버넌스의 합리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각 개별 마을에 대한 아카이브구축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구축되는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관리·서비스할 수 있는 ‘서울시 공동체아카이브 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하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속시키는 동시에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공동체아카이브를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sup>32)</sup>

마지막으로, 민간기록물 기관의 수집과 서비스 범주에 포함시키기

---

31) Community Archives in Cambridgeshire: case-study showing the impact of communityarchives,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page\\_id\\_510\\_path\\_0p6p63p62p.aspx](http://www.communityarchives.org.uk/page_id_510_path_0p6p63p62p.aspx); 이경래·이광석,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37호, 2013.

32) 이와 관련해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립될 경우, 이 기관에서 이러한 ‘공동체아카이브네트워크’를 구축, 관리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시작한 국가기록원은 마을공동체 수준에서, 좀 더 넓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아카이브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무하고 지원할 제도적 방안을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국가기록관리 영역 속으로 끌어들이 민간영역에 속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공공영역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록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하는 기록물뿐만 아니라 공공성 있는 민간기록물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기관의 활동범위를 민간영역, 더 나아가 마을 단위로까지 확장하여 “기록사랑 마을 수요조사”(2010년)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내 아카이브 정책에 반영된 사회적 소외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로부터 출발한 이러한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는 소외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촉진을 그 목표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벤트적이고 프로젝트성 성격을 띠는 이러한 민간영역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기획 및 접근법은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공동체기록을 지속적으로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에 포용하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적어도 기관의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을공동체아카이브를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적어도 공동체 아카이브와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비전 아래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또한 공동체 단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동체아카이브네트워크 움직임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기록원은 지금까지 민간기록에 대한 접근방식, 즉 물리적 수집과 보관, 그리고 통제에 치중한 접근방식을 벗어나 탈보관주의에 입각하여 분산 보존과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통합서비스 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ABSTRACT

# The Politics and Governance of 'Maeul' Community Archives in South Korea

Lee, Kyong Rae

Maeul-making, which is to restor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maeul as a living community has been proceed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since the 1990s when political democracy and local government in Korean society has been progressed in full-scale. Although New Maeul Movement has been done in the 1970s before and after, it is different from maeul-making because it was focused mainly on improving physical environments of rural communities and initiated by government. The development of maeul community archives in Korea has been related closely to such a maeul-making since the 1990s.

Maeul-based community archives, maeul community archives had been begun to build as part of maeul-making and grass-root movement by the 2000s. Initiated by self-motivated communities, maeul community archives were carried out through cooperations between civic activists and residents in maeul communities and voluntary professional archivists from outside. Although records about the maeul community has been collected by mainstream cultural institutions such as public archives, museum, local historical association, and local cultural center, it was at this time to collect records of the maeul community by self-motivated local residents. This tendency of 'independent' maeul community archives, however, is currently

entering upon a new phase with the city of Seoul's project (2012) to support making a maeul community, that is, the governance phase based on private-government partnership. At this point of time, it is important for maeul community archives to be built on privately-led governance model that guarantees their autonomy and at the same time bring government's knowhow and supports into them, as opposed to the way captured or driven unilaterally by government.

This article explores the growth of maeul community archives and collections in Korean society through a range of self-motivated bodies; the interaction with government; and as a result of those interactions, the creation of maeul community archives based on governance. To introduce and explicate the motivations behind maeul archiving endeavors, this article will first sketch something of the historical,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in which 'maeul' communities have arisen, collapsed, and restored. It will then examine in more detail some specific examples of maeul community archives as grass-root movement of maeul community. The third section will attempt to identify the governance model of maeul community archives under the auspices of the city of Seoul and its limitations. Finally through these activities, it will suggest the ways in which maeul community archives commit themselves to their duty of grass-root movement of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secure sustainability, that is, concrete ways of privately initiated governance model.

**Key words** : Maeul Community, Maeul Making, Maeul Community Archives, Grass-roots Movement, Private-Government Partnership, Governance Model, Seongmisan Maeul Archives, Poolmoo Collecti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